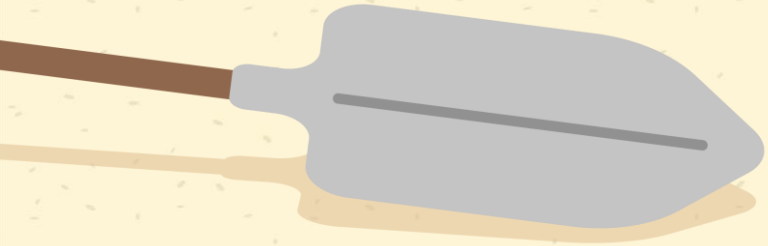


2026년 농업인 공익직불제 교육자료





2026년 농업인 공익직불제 교육자료

01

공익직불제의 이해

02

공익직불제의 농촌 공익 기능과 준수사항

03

부정 수급의 방지 및 적발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공익직불제의 개념

공익직불제

: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공익직불제의 구분



소농직불

지급방식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농가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

면적 기준 및 단가

면적기준
01 ~ 0.5ha

단가
130만원(정액)

소농직불 지급요건

- 1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 합이 0.5ha 이하이어야 함
- 2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 포함) 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함
- 3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함

소농직불 지급요건

4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5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6

농가 내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7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면적직불

소규모 농가라도 7가지 지급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에 해당

면적 기준 및 단가

면적기준

농지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

1구간

2ha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

※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

단가

단가 X 면적

※ 최대 지급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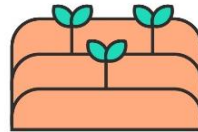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 충족** 및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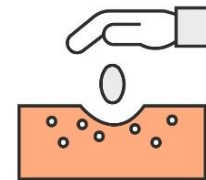
쌀직불

'98,01,01 ~ '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01,01 ~ '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01,01 ~ '05,12,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

✓ 본인 소유의 농지이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 자기 소유가 아닌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

✓ 적법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공익직불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을 포함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유지했거나
실제로 경작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단,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고령,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 가능합니다!

※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 공익직불제의 의무 준수사항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것이 있나요? 🔍



공익직불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6가지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1 생태계 보전



2 마을 공동체
활성화



3 영농 활동
준수



4 먹거리 안전



5 환경 보호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①

생태계 보전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2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등 금지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②

마을 공동체 활성화



4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③

영농 활동 준수



5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6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7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④

먹거리 안전



8 농약 안전사용 기준

9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10 비료 사용기준 준수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⑤

환경 보호



- 11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12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13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14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 1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1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

그러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① 생태계
보전

✓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의 **패널티 부과**

③ 영농 활동
준수

✓ 여러건 동시 위반 시(준수사항 개별 적용) 각 감액률 합산 **최대 100%**, **전액 감액**

✓ 동일 의무사항을 **다음해에 반복 위반**했을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두 배 적용**

④ 먹거리 안전

⑤ 환경 보호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의 구분

✓ 양도세 감면 목적

농지 소유주가 실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를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직불금 수령 후 그것을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양도 및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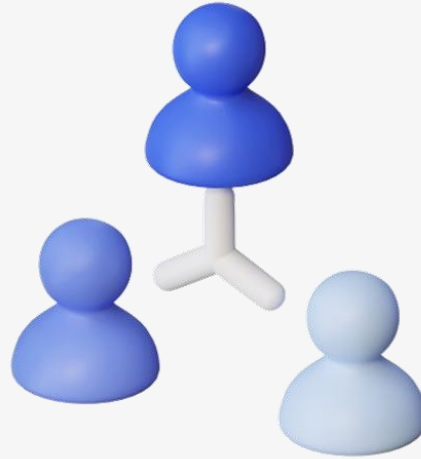
✓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 증여 받은 농지를 가족이 경작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은 상속 증여 받은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음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의 구분



✓ **공동 소유 농지를 분리하여 등록 후 직불금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

✓ **지급 한도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대 분리 후 세대별 한도 이상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의 구분

- ✓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 몸이 불편해 영농행위를 **타인에게 대행시키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직불금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 오래 방치하여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는 **폐경작지를 경작농지로 허위신고**한 경우
- ✓ **농림사업과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 ✓ 몸이 불편해 영농행위를 타인에게 대행시키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 ✓ 부정수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보조금 전액 환수 혹은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 ✓ 8년 간 기본형 직불금 등록 제한
- ✓ 농림사업과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의 예방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예방 조치



사전에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소농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강화

- ▶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 하여 정보 오류 최소화



실 경작여부 관련 각종 검증정보를 활용해
합동조사 및 점검을 하는 등 현장조사 강화

- ▶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진행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의 예방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예방 조치



농지소재지 이장, 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제출

▶ 신규신청자, 농지 50km 이상의 관외경작자 해당





준수사항 의무교육 진행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 가능

- ✓  - 농관원, 시군구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  - 콜센터(1334)를 통한 구두 신고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건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징역·벌금형 확정 혹은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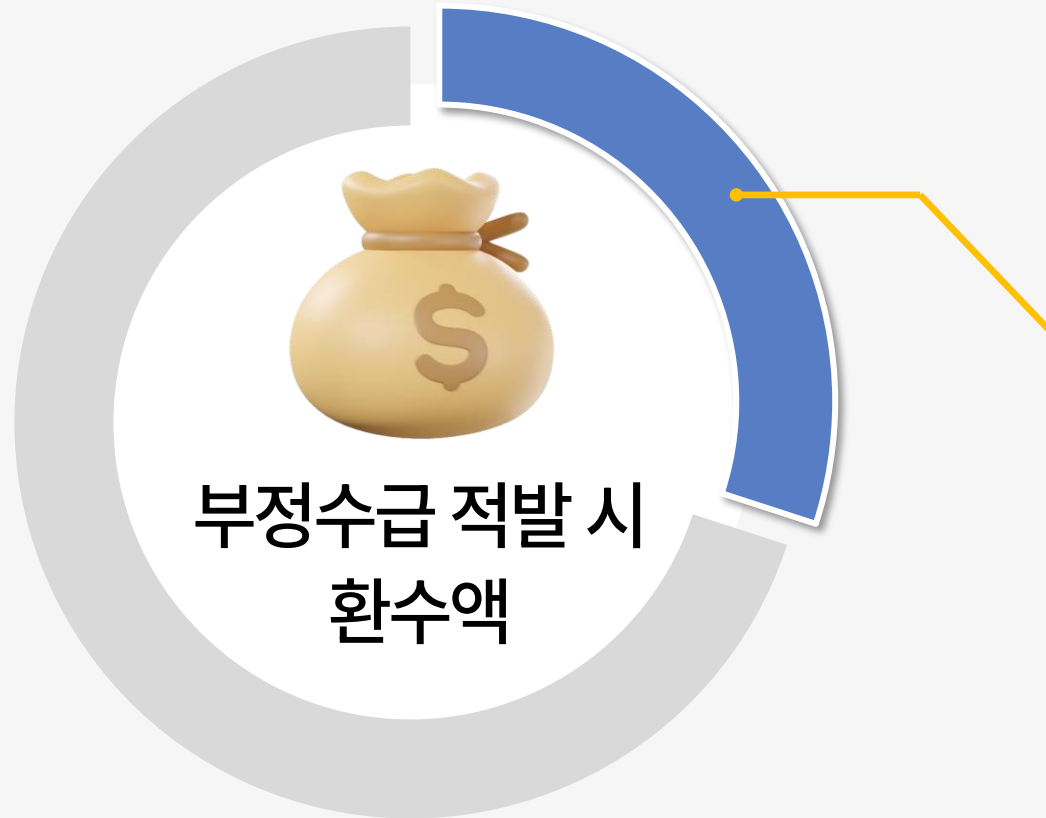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건

지급 신청자로 통보 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지급 신청서’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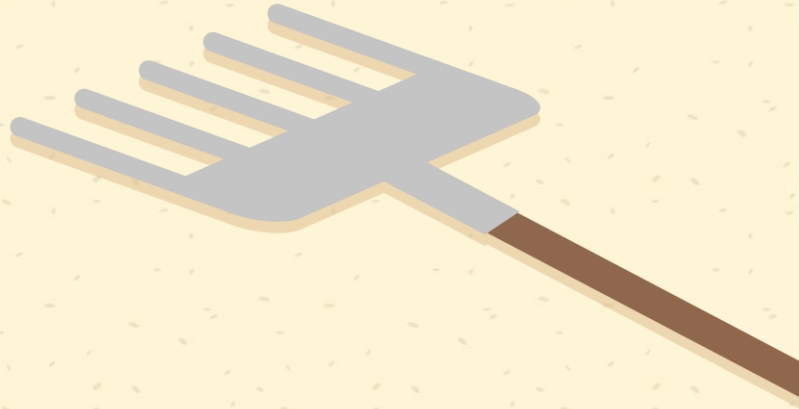
▶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비용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액 (미지급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급

※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naqs.go.kr/hp/main/main.do> 🔍

